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100021-10

ISSN 3058-6607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2025. 10. 31.

제2권 제1호

권익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기획

일반

4

새로운 청렴도
평가측정지수로서
부패통제지수 및 청렴지수의
추이분석

이 정 주

새로운 청렴도 평가측정지수로서 부패통제지수 및 청렴지수의 추이분석: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Corruption Control Index and Integrity Index as New Measures of Integrity Evaluation: Focusing on the Asia-Pacific Region

이정주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연구교수 / 행정학박사 /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부패인식지수란?
2. 기존 부패인식지수(CPI)의 한계
3. 부패통제지수
4. 청렴지수의 개념 및 필요성

III. 청렴지수모형에 따른 평가

1. 부패통제지수의 적정성 검토
2. 청렴지수모형의 구성
3. 부패통제지수 평가
4. 청렴지수

IV. 요약 및 결론

논문접수 '25.03.11. | 심사개시 '25.07.07. | 게재확정 '25.09.22.

* 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분야 국제평가지수의 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용역 중 제5장 제1절 새로운 부패통제지수 및 청렴지수 모형 개발·적용을 통한 개선전략 부분을 논문양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2024년 부패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토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논문임을 밝힙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존 이정주(2022)의 연구에서 최초로 제시한 부패통제지수(CCI)의 원천자료가 업데이트되어 부패통제지수(CCI)의 추이분석 및 부패통제지수(CCI)와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합한 청렴지수(II)의 추이분석이 가능해져 아태지역 27개 국가의 청렴도 개선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패통제지수(CCI)의 원천자료를 토대로 부패인식지수(CPI)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부패통제지수(CCI)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연구(이정주, 2022)와 비교해 유의미한 18개 원천자료 중 하나의 자료를 제외하고 17개 모두 동일하다는 점, 또한 기존 연구에서 부패통제지수(CCI)를 구성하는 총 21개의 원천자료 중 유의미한 변수가 86%에 그친 반면, 현 연구에서는 95%가 유의미하여 부패통제지수(CCI)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3년 부패통제지수(CCI) 평가결과, 상위 10위권 국가 중 2021년 평가에 비해 한국(+0.14점)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보다 부패통제지수가 높은 뉴질랜드(-0.12점), 호주(-0.03점), 대만(-0.03점), 싱가포르(-0.15점), 홍콩(-0.06점), 일본(-0.05점) 국가들은 오히려 부패통제노력이 이전보다 후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렴지수의 점수추이를 보면 한국보다 청렴지수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호주(+0.12)를 제외한 국가들의 청렴지수가 변동이 없거나(일본), 하락(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만, 부탄)하는 경향을 보인데 비해 한국(+0.28)의 청렴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IT 강국의 이점을 살려 온라인상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자유경쟁을 허용함과 동시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사법의 공정한 집행 및 사법부 독립을 위한 지속적 개선과 불법자금을 막기 위한 자금 세탁방지 강화가 더욱더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패통제지수(CCI)가 부패인식지수(CPI)보다 높은 나라로 기존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방식 위주로 운영될 경우 부패통제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국가청렴도가 과소평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청렴도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투명성기구(TI)에게 기존 부패인식지수(CPI) 이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부패통제지수와 같은 별도 지수를 만들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게 하거나, 여건상 부패인식지수(CPI)를 그대로 운영해야 할 경우 부패인식지수 원천자료에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패통제지수 원천자료를 적극 반영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추이분석, 청렴도 평가, 부패통제지수, 청렴지수, 부패인식지수, 아태지역

I. 서론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는데 잘 알려진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뇌물이나 공권력의 사적 남용정도 등과 같이 부패의 실태의 인식 평가로 한 국가의 반부패 청렴·노력도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청렴도를 개선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정주(2022)의 연구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 NIS), 세계은행(World Bank: WB)의 윤리적 정부추진전략, 세계은행(WB)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IPI)를 고려해서 법치주의, 부패통제, 정부효율성, 정부투명성, 규제완화 및 품질, 언론의 자유, 시민참여 관점(범주)을 반영한 부패통제지수(Corruption Control Index: CCI)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기존 부패인식지수(CPI)와 통합한 청렴지수(Integrity Index: II)를 최초로 제안해 기존 청렴도 평가방식을 보완하고자 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이정주, 2022)에서는 부패통제지수(CCI)의 원천자료가 주로 2021년도 자료에 기반 해 처음으로 부패통제지수(CCI)가 제시되었기에 이에 대한 적합성 추가 검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청렴노력도 관점의 부패통제지수(CCI) 원천자료가 2022년 또는 2023년 자료로 업데이트 되어¹⁾ 기존에 제안했던 부패통제지수(CCI)가 적합한지 검증하는데 유용한 시점이기도 하다.

방법론적으로 부패통제지수(CC)의 적합성 검증은 기존 이정주 연구(2022)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패통제노력이 청렴도 향상과 관련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부패통제지수를 구성하는 원천자료와 2023년 부패인식지수와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기존 연구결과(이정주, 2022)의 유의미한 원천자료와 유사한지 비교 검증한다.

1) 특히 부패통제지수의 주요 원천자료로 활용되는 공공청렴지수(IPI)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1995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주관적 평가 요소가 반영된 것과 달리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2015년부터 2년을 주기로 발표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는 2023년 자료이며, 향후 2025년도에 발표될 예정이다.

만약 부패통제지수(CCI)를 구성하는 원천자료가 청렴성 평가요소로 적합하다면 부패통제노력에 대한 부패통제지수(CCI) 추이분석 이외에 부패인식지수(CPI)와 부패통제지수(CCI)가 통합된 청렴지수(II) 추이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부패통제지수(CCI)를 통해 아태지역의 어느 국가가 좀 더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부패통제지수(CCI)를 감안한 청렴지수(II)의 순위와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렴노력의 변화정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청렴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지, 반부패·청렴노력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과소 평가받는지, 향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좀 더 해야 청렴도가 개선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공공분야의 부패의 정도를 기업인과 전문가의 인식에 기초해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부패인식지수(CPI)는 180개국이 측정되었다.(<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3>) 부패인식지수는 베텔스만 재단, 세계경제포럼,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정치위험서비스그룹 등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별로 최소 3개 원천자료에서 최대 10개 자료가 활용되며, 평균적으로는 7개,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10개의 원천자료를 통해 청렴도가 측정되고 있다.

〈표 1〉 CPI를 구성하는 원천자료(2023년 기준)

	원천자료	대상 국가 수
1	African Development Bank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2021 (AFDB)	37
2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2022 (BF-SGI)	41
3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 2024 (BF-BTI)	137
4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isk Service 2023 Code (EIU)	131
5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2023 Code (FH)	29
6	Global Insight Business Conditions and Risk Indicators 2022 Code (GI)	209
7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3 Code (IMD)	64
8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2023 Code (PERC)	16
9	The PRS Group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2023 Code (PRS)	140
10	World Bank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2022 Code (WB)	74
11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2023 Code (WEF)	91
12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23 Code (WJP)	142
13	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 2023 (VDEM)	179

〈표 2〉 원천자료수별 국가 수(2023년)

3개 자료	4개 자료	5개 자료	6개 자료	7개 자료	8개 자료	9개 자료	10개 자료
13개국	8개국	16개국	26개국	39개국	44개국	25개국	9개국

평가유형으로는 IMD, PERC, WEF는 기업인 설문조사를 활용하며 AFDB, BF(SGI), BF(BTI), EIU, FH, GI, PRS, WB, WJP, VDEM은 전문가 평가를 활용한다.(이정주, 2022: 10 재인용) 이 중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CPI 원천자료로는 BF(SGI),²⁾ BF(BTI), WJP, WEF, EIU, GI, IMD, PERC, PRS, VDEM 자료이다.(이정주, 2022: 10 재인용)

부패측정에 활용하는 13개의 원천자료를 보면 특정영역에 있어 공권력의 사적 남용이나 예산낭비 등과 같은 부패개념에 근거해 부패정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원천자료와 부패억제적 요소(부패통제장치)가 강할 경우 부패의 심각성이 낮을 것이라고 보고 부패현상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자료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정주, 2022: 10 재인용) 그중 부패통제 요소를 담고 있는 FH, SGI, TI를 제외한 10개의 원천자료가 뇌물이나 부패의 존재정도와 같은 부패실태측정이 대다수 자료이기 때문에, CPI지수는 한 국가의 부패정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주, 2022: 10 재인용)

〈표 3〉 CPI 원천자료의 측정항목 및 측정방식

구분	지수구분(기관)	측정항목	측정방식	
			직접측정	간접측정
기업인 설문조사	국제경영개발원(IMD)	부패와 뇌물의 존재 여부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국가별 부패수준	○	
	세계경제포럼(WEF)	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서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공적기금의 유용 정도	○	

2) 2024년 CPI 평가의 원천자료상에서 SGI가 제외되어 총9개가 활용된다.

구분	지수구분(기관)	측정항목	측정방식		
			직접측정	간접측정	
전문가평가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	공적영역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정도	○		
	프리덤 하우스(FH)	정부의 반부패개혁의 이행정도 등		○	
	베델스만 재단 (BF)	지속가능지수 (SGI)	공무원의 사익목적 지위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정도		○
		변혁지수 (TI)	직권남용 공무원의 처벌 가능성/정부의 부패 억제 기능		○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	공무원의 공적지위(공공의료시스템, 규제당국, 경찰, 법원 등) 악용 정도	○		
	세계은행(WB)	공적영역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정도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원 (VDEM)	행정, 입법, 사법 부패수준 공공부문 부패수준	○		
	아이에이치에스 마켓 (GI)	경제활동(수출입이나 일상업무포함)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나 뇌물	○		
	이코노믹인텔리전스 유닛 (EIU)	공적기금의 관리 책임, 유용, 감독 등 주로 공공자원의 관리/계약 등에서의 뇌물 관행	○		
정치위기관리그룹 (PRS)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 후원과 호의의 교환 등 정치 시스템 내부의 부패	○			

출처: 이정주(2022). CPI 지수 비판적 검토를 통한 새로운 청렴지수모형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p.11

2. 기존 부패인식지수(CPI)의 한계

부패인식지수(CPI)는 1995년부터 평가가 시작된 이후 부패개념 측정의 어려움, 조사대상자의 상이함, 점수 산출 과정상의 편의, 특정국가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 속성, 3) 선진국의 부패가 적고 후진국의 부패가 많다는 고정관념⁴⁾으로 제대

3) Anderson and Heywood(2009)는 부패지수가 주로 개발도상국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성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선진국에서 작성된 자료를 사용하고 해당 국가의 직접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정주, 2022: 13 재인용)

4) 김진영(2019)은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 기독교 전통을 가진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에 대해서는 부패

로 된 평가인가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제투명성 기구(TI)는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서 산출한 원천자료를 확보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방법론적 타당성을 통한 객관화 작업으로 부패인식지수(CPI)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부패인식지수(CPI)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사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함인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은 부패인식지수(CPI) 원천자료가 부패의 현 실태 파악 중심으로 국가별로 부패통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2015년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가 부패통제능력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중심의 공공청렴지수(IPI)를 개발한 것도 이러한 인식하에 비롯되었다.

두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PI)가 동일한테 국가 간 반부패 청렴정책이나 제도를 통한 부패방지 노력 간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의 청렴수준이 동일하다고 평가 할 수 없다.

부패억제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반영되지 못하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의 실제 청렴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특히 청렴이 사회적 자본으로 내재화 되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시스템이 불리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대표적 국가이며,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내재화하는 등 부패통제노력 위주의 청렴문화형성 전략을 구사하기에 현 평가시스템에서 불리할 수 있다.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부패통제노력요소가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패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이외에 부패방지노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청렴도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가 이정주(2022) 연구로 기존 부패인식지수(CPI) 이외에 부패방지노력부분이 반영된 부패통제지수(CCI)가 새롭게 제안되었고, 이 두 가지를 통합해 평가모형으로 제안되었던 것이 청렴지수(II)이다.

가 과소하게 인식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실제 이상으로 부패가 과장된다고 보았다.(이정주, 2023: 13 재인용).

3. 부패통제지수(Corruption Control Index, CCI)

부패통제지수(CCI)는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투명성 기구(TI)의 국가청렴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 NIS), 세계은행(WB)의 윤리적 정부추진전략, 세계은행(WB)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IPI)를 고려해서⁵⁾ 법치주의, 부패통제, 정부효율성, 정부투명성, 규제완화 및 품질, 언론의 자유, 시민참여 관점(범주)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부패통제지수의 원천자료로는 주기적 발표를 통해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용이한 세계 거버넌스 지표(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를 구성하는 요소 중 반부패·청렴 관련된 원천자료와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의 원천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4〉 범주(관점)별 부패통제지수 측정지표 및 원천자료

범주(관점)	부패통제지수 측정지표	원천자료	출처
법치주의	• 권력분립, 사법부독립, 시민권, 직위남용기소의 정도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BTI)	WGI
	• 사법의 공정한 집행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WCY)	WGI
	• 암거래 경제의 경제발전 저해 정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WCY)	WGI
	• 법과 질서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PRS)	WGI
	• 정부, 시민 또는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 정도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WEF)	IPI

5) 국제투명성 기구(TI)의 국가청렴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 NIS), 세계은행(WB)의 윤리적 정부추진전략, 세계은행(WB)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IPI)의 구체적 내용은 이정주(2022)의 pp. 16~24에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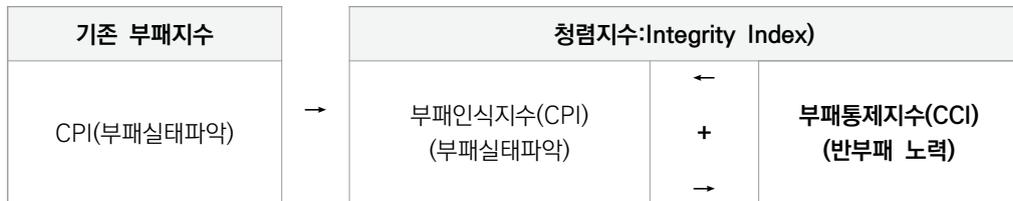
범주(관점)	부패통제지수 측정지표	원천자료	출처
부패통제	• 반부패정책의 부패통제 정도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BTI)	WGI
	• 범죄의 효율적 통제	WJP Rule of Law Index(WJP)	WGI
정부효율성	• 관료주의 질/제도효율성 및 과도한 관료주의/레드테이프 정도	Country Viewswire Service(EIU)	WGI
정부투명성	• 정부정책의 투명성 만족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WCY)	WGI
	• 행정투명성 정도(공공조달, 토지대장, 상거래 등록, 감사원의 연례보고서의 공개정도)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ERCAS)	IPI
규제완화 및 품질	• 관료주의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WCY)	WGI
	• 온라인서비스(무역개방성 정도)	UN 전자 정부 개발 지수	IPI
	• 불공정한 경쟁 관행, 가격통제, 차별적 관세, 과도한 보호, 차별적 과세의 정도	Country Viewswire Service (EIU)	WGI
언론의 자유	• 언론자유지수(국경 없는 기자회)	Worldwide Press Freedom Index(RSF)	WGI
	• 표현의 자유 확장	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VDM)	WGI
	• 언론의 자유	Reporter without Border's Press Freedom Index	IPI
시민참여	• 열린 예산지수(Open Budget Index)	Open Budget Index(OBI)	WGI
	• 제한된 정부 권력	WJP Rule of Law Index(WJP)	WGI
	• 열린 정부	WJP Rule of Law Index(WJP)	WGI
	• 광대역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 수와 전체 인구 대비 Facebook 사용자 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과 인터넷 세계 통계(Internet World Stats)	IPI
	• 행정부의 예산 제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의 정도와 질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IPI

4. 청렴지수(Integrity Index, II)의 개념 및 필요성

청렴지수(Integrity Index, II)는 부패를 억제하는 제도를 담은 부패통제지수(Corruption Control Index, CCI)와 기존 부패실태파악에 초점을 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종합한 지수이다.

기존 일반적인 활용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평가로 결과론적 접근으로 부패억제를 위한 노력과정이 반영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하기에 부패원인이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 힘든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청렴지수(II)는 기존 부패실태위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완하면서 부패통제지수(CCI)를 통해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지수라 할 수 있다.



출처: 이정주(2022). CPI 지수 비판적 검토를 통한 새로운 청렴지수모형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p.15

[그림 1] 청렴지수

Ⅲ. 청렴지수모형에 따른 평가

1. 부패통제지수의 적정성 검정

부패통제의 노력을 반영하는 부패통제지수의 측정지표가 잘 구성되어 있다면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이정주 연구(2022)에서는 2020년, 2021년 부패통제 측정지표의 원천자료와 2021년도 부패인식지수(CP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1개의 변수 중 “정부투명성 중 정부정책의 투명성 만족도”, “언론의 자유 중 표현의 자유확장”, “시민참여 중 행정부 예산 제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의 정도와 질”을 제외한 18개의 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022, 2023년도 부패통제 측정지표의 원천자료와 2023년도 부패인식지수(CP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및 품질에서 관료주의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한 20개의 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노력도가 부패인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에 입각해 볼 때 부패통제지수를 구성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기존 연구결과(2022)에는 86%, 현 연구에서는 95%로 부패통제지수는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연구시점에 따라 달리 나타난 변수의 유의미성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축척을 통한 추가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표 5〉 부패통제요소 측정지표와 2023년 CPI와의 관련성

범주	측정지표	2021 CPI와의 관련성	2023 CPI와의 관련성
법치주의	• 권력분립, 사법부독립, 시민권, 직위남용기소의 정도(V1)	.696**	.714**
	• 사법의 공정한 집행(V2)	.831**	.799**
	• 암거래 경제의 경제발전 저해 정도(V3)	.866**	.841**
	• 법과 질서(V4)	.792**	.792**
	• 정부, 시민 또는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 정도(V5)	.877**	.820**
부패통제	• 반부패정책의 부패통제정도(V6)	.935**	.945**
	• 범죄의 효율적 통제(V7)	.714**	.671**
정부효율성	• 관료주의 질/제도효율성 및 과도한 관료주의/레드테이프 정도(V8)	.868**	.882**
정부투명성	• 정부 정책의 투명성 만족도(V9)	.532	.535*
	• 행정투명성(공공조달, 토지대장, 상거래 등록, 감사원의 연례보고서의 공개정도)(V10)	.697**	.593**
규제완화 및 품질	• 불공정한 경쟁 관행, 가격통제, 차별적 관세, 과도한 보호, 차별적 과세의 정도(V11)	.880**	.863**
	• 관료주의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V12)	.616*	.485
	• 온라인 서비스(무역개방성 정도)(V13)	.728**	.787**
언론의 자유	• 언론자유지수(국경 없는 기자회견)(V14)	-.502* ¹⁾	.596** ²⁾
	• 표현의 자유 확장(V15)	.389	.475*
	• 언론의 자유(V16)	.687**	.735**
시민참여	• 열린 예산지수(Open Budget Index) (V17)	.668*	.738**
	• 열린 정부 (V18)	.859**	.866**
	• 제한된 정부 권력(V19)	.784**	.811**
	• 행정부의 예산 제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의 정도와 질(V20)	.409	.489*
	• 광대역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 수와 전체 인구 대비 Facebook 사용자 수(V21)	.651**	.67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함(양측)

1) 원 자료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가 높게 설계

2) 원 자료점수가 높을수록 언론자유가 높게 설계

2. 청렴지수모형의 구성

앞선 논의를 토대로 청렴지수모형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표 6〉 청렴지수모형 구성

청렴지수(Integrity Index)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부패실태파악)	← + →	부패통제지수 (CCI: Corruption Control Index) (반부패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분립, 사법부독립, 시민권, 직위남용기소의 정도(V1) • 사법의 공정한 집행(V2) • 암거래 경제의 경제발전 저해 정도(V3) • 법과 질서(V4) • 정부, 시민 또는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 정도(V5) 	
CPI 점수	+	법치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정책의 부패통제 정도(V6) • 범죄의 효율적 통제(V7)
		부패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 질/제도효율성 및 과도한 관료주의/레드테이프 정도(V8)
		정부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책의 투명성 만족도(V9)
		정부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투명성(공공조달, 토지대장, 상거래 등록, 감사원의 연례보고서의 공개정도)(V10)
		규제완화 및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한 경쟁 관행, 가격통제, 차별적 관세, 과도한 보호, 차별적 과세의 정도(V11) • 온라인 서비스(무역개방정도)(v13)
		언론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자유지수(국경 없는 기자회견)(V14) • 표현의 자유 확장(V15) • 언론의 자유(V16)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예산지수(Open Budget Index)(V17) • 열린 정부(V18) • 제한된 정부 권력(V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의 예산 제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의 정도와 질(V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대역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 수와 전체 인구 대비 Facebook 사용자 수(V21)

3. 부패통제지수 평가

1) 원천자료 전체

부패인식지수(CPI)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20개)를 중심으로 각 변수의 원점수를 표준화(z-score)시킨 다음 국가별로 사용된 원천자료 수를 고려하여 부패통제지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원천자료는 최소 6개~최대 20개가 활용되었고, 몰디브(1개), 바누아투(1개), 솔로몬 제도(1개), 피지(3개)는 활용 원천자료가 3개 이하로 부패통제노력정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힘들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총 27개국을 대상국가로 하였다.

평가결과, 상위 10권 국가로는 뉴질랜드(1.37점), 호주(1.22점), 대만(1.05점), 싱가포르(0.93점), 홍콩(0.85점), 일본(0.84점), 한국(0.78점), 부탄(0.66점), 말레이시아(0.19점), 인도네시아(0.10점) 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국가 중 부패통제지수(CCI) 순위가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보다 높은 국가로는 호주(1단계), 대만(4단계), 한국(1단계), 인도네시아(6단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부패통제지수 순위보다 높게 나타난 국가로는 싱가포르(2단계), 홍콩(2단계), 일본(1단계), 부탄(2단계)로 나타났다. CPI순위 순위와 부패통제지수 순위가 동일한 국가로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27개국 중 부패통제지수 순위와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간 차이가 3단계 이상 국가를 보면 부패통제지수(CCI) 순위가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보다 높은 국가로는 대만(4단계), 인도네시아(6단계), 파푸아뉴기니(9단계), 몽골(4단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부패통제지수(CCI) 순위보다 높은 국가로 동티모르(3단계), 베트남(7단계), 중국(9단계), 라오스(3단계)로 나타났다.

특히 파푸아뉴기니는 부패통제지수 순위가 부패인식지수 순위에 비해 9단계 높게 나타나 청렴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부패·청렴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와 반대로 9단계 낮게 나타나 반부패 청렴노력에 비해 청렴수준이 과대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패통제지수(CCI) 원천자료 전체평가결과

국가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3	V14	V15	V16	V17	V18	V19	V20	V21	자료수	부패 통제 지수 (평균)	부패 통제 지수 (순위) 27개국	이해 지역 CPI 순위
New Zealand	1.14	1.49	1.17	1.90	0.59	1.21	-0.16	1.80	1.55	1.40	1.73	1.19	1.67	1.82	1.85	1.95	1.19	1.24	18	1.37	1	1		
Australia	0.88	0.80	1.71	1.27	0.76	1.58	0.95	-0.21	1.55	1.30	1.62	0.95	1.34	1.46	1.79	1.70	1.31	1.25	18	1.22	2	3		
Taiwan	2.22	0.16	0.57	1.17	1.95	0.84	0.62	0.63	1.55	1.14	1.46	0.97							10	1.05	3	7		
Singapore	0.56	0.81	1.08	1.17	1.95	1.43	1.58	1.35	1.55	-0.16	-0.63				0.62	0.82			13	0.93	4	2		
Hong Kong	1.08	1.07	0.21		1.01	1.58	1.38	1.14	1.14	-0.33					1.14	0.26			10	0.85	5	3		
Japan	1.01	0.89	1.17	1.94	1.01	1.21	-0.40	0.28	1.34	1.16	0.78	0.97	0.56	0.38	1.14	1.20	-0.13	0.68	18	0.84	6	5		
Korea, South	1.60	-0.69	-1.15	1.17	0.08	1.09	0.92	1.21	-0.84	1.13	0.94	1.52	1.18	1.05	0.94	1.16	1.20	1.01	0.83	1.27	20	0.78	7	8
Bhutan	1.18				1.95	0.09				0.13	0.51	0.08							6	0.66	8	6		
Malaysia	0.25	0.25	-0.42	0.21	0.51	0.66	-0.41	0.84	-0.04	0.46	0.53	0.44	0.72	0.06	0.50	-0.46	-0.68	0.08	-0.73	0.98	20	0.19	9	9
Indonesia	0.56	-0.62	-0.77	-1.29	0.89	-0.64	0.34	-0.28	0.45	-0.21	-0.07	0.44	0.25	0.70	0.06	0.92	0.17	0.76	0.83	-0.52	20	0.10	10	16
Papua New Guinea	0.56		-0.81		-0.21								1.00	0.82		-0.28					8	-0.01	11	20
Thailand	-0.78	-0.18	-0.31	-1.29	-0.46	0.23	-0.16	0.09	-0.98	-0.21	0.33	0.50	0.27	-0.46	0.08	0.20	-0.29	-0.55	0.95	0.93	20	-0.10	12	14
Timor-Leste	0.98				-0.58	0.23				-0.21	-0.48	-1.39		0.71	1.69	-0.16			0.35	-1.27	12	-0.13	13	10
India	0.46	-0.06	-0.43	0.69	-0.77	0.23	-0.25	0.09	0.67	0.46	-0.28	0.58	-0.82	-0.19	-0.94	-1.06	0.43	0.26	-0.72	-1.03	20	-0.13	13	13
Mongolia	0.67	-2.23	-1.73	-0.33	-1.20	-0.21	0.25	-0.28	-1.78	0.46	-0.07	-0.24	0.51	0.71	0.31	0.32	-0.22	0.01	0.35	0.69	20	-0.20	15	19
Nepal	0.36				-0.54	-0.21	-0.25	-1.03		0.46	-1.49	-1.06	0.43	0.87	0.23	-0.94	-0.03	0.33	-0.13	-0.44	16	-0.21	16	14
Sri Lanka	0.36				-0.33	-0.20	-0.21	0.09		-0.21		-0.55	-0.28		-0.61		-0.09	-0.23	-0.97	-0.80	13	-0.31	17	16
Philippines	-0.16	-1.46	-1.17	-1.29	-0.76	-0.21	-1.00	0.09	-1.50	0.46	0.13	-0.22	-0.25	0.27	-0.41	0.80	-0.16	-0.36	0.83	0.08	20	-0.32	18	16
Vietnam	-0.78				0.21	0.61	0.23	0.76	-0.28	-0.21	-0.68	-0.13	-1.52	-1.27	-1.60		-0.42	-0.55	-1.08	0.83	16	-0.37	19	12
China	-0.99	-0.09	0.07	-0.81		0.23	0.00	-0.28	0.29		0.13		-1.61	-1.67		-0.80	-1.36				13	-0.53	20	11
Pakistan	-0.58				-0.81	0.27	-1.07	-1.84	-0.66	0.46	-1.29	-0.54	-0.62	0.28	-0.76	-0.52	-0.68	-0.36	0.71	-1.67	17	-0.57	21	20
Bangladesh	-0.58				-1.29	-0.88	-0.64	-0.41	-1.03	-0.21	-0.88	-0.11	-0.89	-0.40	-1.01	-1.48	-0.74	-0.98	0.11	-1.05	17	-0.73	22	23
Cambodia	-1.20				-0.81	-1.50	0.09			-1.56	-1.27	-0.50		-0.65		-1.84	-1.67	-1.68	-0.07	12	-1.05	23	24	
Afghanistan	-0.68				-0.64	-2.92	-1.40				-0.68	-0.63	-1.50		-0.70	-1.00	-0.92				10	-1.11	24	25
Laos	-1.09				-1.07			-1.03			-0.68	-1.16	-1.73								6	-1.13	25	22
Korea, North	-1.40				-1.50			-0.66			-2.30	-1.69	-1.78								7	-1.30	26	27
Myanmar	-1.51				-0.81	-1.26	-0.64	0.00	-1.40	-2.90	-0.48	-1.82		-1.40	-1.48	-1.39	-1.42	-2.04	-1.09	15	-1.31	27	25	

V1: 범죄자의 권력분리, 사법부 독립, 시민권, 직위남용기소의 정도, V2: 범죄자의(사법)의 공정한 진행, V3: 범죄자의(양거래) 경제의 경제발전, 저해 정도, V4: 범죄자의(범죄) 죄사, V5: 범죄자의(징부) 시민 또는 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 정도, V6: 부패통제(반부패정책)의 부패통제 정도, V7: 부패통제(범죄)의 효율적 통제, V8: 정부효율성(관료주의 질/제도효율성 및 과도한 관료주의/레드테이프 정도), V9: 정부 부패방지(정부정책)의 투명성, 민속도, V10: 행정투명성(공공소셜, 토지대장, 선거제 등), 감사원의 연례보고서의 공개정도, V11: 규제완화 및 품질(불공정한 경쟁, 관행, 가격통제, 차별적 관세, 과도한 보호, 차별적 관세)의 정도, V13: 규제완화 및 품질(온라인 서비스(무역개발정도)), V14: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지수(국경 없는 기자회)), V15: 언론의 자유(확장), V16: 언론의 자유, V17: 시민참여(영리 예산지수), V18: 시민참여(영리 정부), V19: 시민참여(제한된 정부 권력), V20: 시민참여(행정부의 예산 제한)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의 정도와 질, V21: 시민참여(광범위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 수와 전체 인구 대비 Facebook 사용자 수)

2) 추이분석

아태지역 27개국 중 2021년 대비 2023년 부패통제지수가 가장 많이 개선된 상위 10개 국가로는 네팔(+0.26), 파키스탄(+0.18), 동티모르(+0.16), 한국(+0.14), 인도네시아(+0.13), 베트남(+0.11), 몽골(+0.10), 말레이시아(+0.07), 태국 및 방글라데시(+0.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부패통제지수 상위 10위권 국가 중 개선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국이 개선정도 0.14점, 개선 순위 4위로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다 부패통제지수가 높은 뉴질랜드(-0.12점), 호주(-0.03점), 대만(-0.03점), 싱가포르(-0.15점), 홍콩(-0.06점), 일본(-0.05점) 국가들은 오히려 부패통제노력이 이전보다 후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국가가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들보다 청렴도 개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부패통제지수가 의미 있고 이러한 사항이 청렴도 평가시스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부패통제지수의 추이분석(2023년, 2021년)

국가	2023 부패통제지수(평균) (2022-2023)	2021 부패통제지수(평균) (2020-2021)	개선 정도	개선 순위
New Zealand	1.37	1.49	-0.12	23
Australia	1.22	1.25	-0.03	14
Taiwan	1.05	1.08	-0.03	14
Singapore	0.93	1.08	-0.15	24
Hong Kong	0.85	0.91	-0.06	18
Japan	0.84	0.89	-0.05	17
Korea, South	0.78	0.64	0.14	4
Bhutan	0.66	0.87	-0.21	25
Malaysia	0.19	0.12	0.07	8
Indonesia	0.10	-0.03	0.13	5

국가	2023 부패통제지수(평균) (2022-2023)	2021 부패통제지수(평균) (2020-2021)	개선 정도	개선 순위
Papua New Guinea	-0.01	-0.04	0.03	11
Thailand	-0.10	-0.16	0.06	9
Timor-Leste	-0.13	-0.29	0.16	3
India	-0.13	-0.02	-0.11	22
Mongolia	-0.20	-0.30	0.10	7
Nepal	-0.21	-0.47	0.26	1
Sri Lanka	-0.31	-0.09	-0.22	26
Philippines	-0.32	-0.30	-0.02	13
Vietnam	-0.37	-0.48	0.11	6
China	-0.53	-0.45	-0.08	19
Pakistan	-0.57	-0.75	0.18	2
Bangladesh	-0.73	-0.79	0.06	9
Cambodia	-1.05	-0.97	-0.08	19
Afghanistan	-1.11	-1.01	-0.10	21
Laos	-1.13	-1.09	-0.04	16
Korea, North	-1.30	-1.31	0.01	12
Myanmar	-1.31	-1.01	-0.30	27

3) 한국사회의 부패통제노력정도 평가

(1) 한국보다 CPI가 높은 국가의 2023년 부패통제지수 원천자료와의 비교

우리나라보다 CPI가 높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가 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V2: 법치주의<사법의 공정한 집행>”, “V3: 법치주의<암거래 경제의 경제발전 저해 정도>”, “V5: 법치주의<정부, 시민 또는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 정도>”, “V6: 부패통제<반부패정책의 부패통제 정도>”, V9: 정부투명성<정부정책의 투명성 만족도>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2023년 평가에서 새로운 변수로 들어간 V9를 제외한 V2, V3, V5, V6은 2021년 평가결과와 동일하게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타 국가에 비해 “V13: 규제완화 및 품질<온라인 서비스(무역개방정도)>”, “V21: 시민참여<광대역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 수와 전체 인구 대비 Facebook 사용자 수>”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13은 2021년 평가에서도 경쟁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2023년 평가에서는 V21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2021년 평가결과(이정주, 2022)와 거의 유사하다. 한국의 청렴성 개선을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불법자금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의 강화”, “IT 기술을 통한 무역의 장벽의 철폐와 자유경쟁 허용”과 같은 부패통제노력을 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정부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소통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9〉 한국보다 부패인식지수(CPI)가 높은 국가와의 반부패통제지수(CCI) 원천자료(2023) 비교

국가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3	V14	V15	V16	V17	V18	V19	V20	V21
New Zealand (A)		1.14	1.49	1.17	1.90		0.59	1.21	-0.16	1.80	1.55	1.40	1.73	1.19	1.67	1.82	1.85	1.95	1.19	1.24
Singapore (B)	0.56	0.81	1.08	1.17		1.95	1.43	1.58	1.35		1.55		-0.16	-0.63			0.62	0.82		
Australia (C)		0.88	0.80	1.71	1.27		0.76	1.58	0.95	-0.21	1.55	1.30	1.62	0.95	1.34	1.46	1.79	1.70	1.31	1.25
Hong Kong(D)		1.08	1.07	0.21			1.01	1.58	1.38		1.14		-0.33				1.14	0.26		
Japan(E)		1.01	0.89	1.17	1.94		1.01	1.21	-0.40	0.28	1.34	1.16	0.78	0.97	0.56	0.38	1.14	1.20	-0.13	0.68
Bhutan(F)	1.18					1.95		0.09			0.13		0.51	0.08						
Taiwan (G)	2.22	0.16	0.57	1.17		1.95		0.84	0.62		0.53		1.46	0.97						
Korea, South(H)	1.60	-0.69	-1.15	1.17	0.08	1.09	0.92	1.21	-0.84	1.13	0.94	1.52	1.18	1.05	0.94	1.16	1.20	1.01	0.83	1.27
차이(H-A)		-1.83	-2.64	0.00	-1.82		0.33	0.00	-0.68	-0.67	-0.61	0.12	-0.55	-0.14	-0.73	-0.66	-0.65	-0.94	-0.36	0.03
차이(H-B)	1.04	-1.50	-2.23	0.00		-0.86	-0.51	-0.37	-2.19		-0.61		1.34	1.68			0.58	0.19		
차이(H-C)		-1.57	-1.95	-0.54	-1.19		0.16	-0.37	-1.79	1.34	-0.61	0.22	-0.44	0.10	-0.40	-0.30	-0.59	-0.69	-0.48	0.02
차이(H-D)		-1.77	-2.22	0.96			-0.09	-0.37	-2.22		-0.20		1.51				0.06	0.75		
차이(H-E)		-1.70	-2.04	0.00	-1.86		-0.09	0.00	-0.44	0.85	-0.40	0.36	0.40	0.08	0.38	0.78	0.06	-0.19	0.96	0.59
차이(H-F)	0.42					-0.86		1.12			0.81		0.67	0.97						
차이(H-G)	-0.62	-0.85	-1.72	0.00		-0.86		0.37	-1.46		0.41		-0.28	0.08						

V1: 법치주의(권력분립, 사법부독립, 시민권, 직업남용기소의 정도), V2: 법치주의(사법의 공정함 집행), V3: 법치주의(암거래 경제의 경제발전 저해 정도), V4: 법치주의(법과 질서), V5: 법치주의(정부, 시민 또는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 정도), V6: 부패통제(반부패정책의 부패통제 정도), V7: 부패통제(범죄의 효율적 통제), V8: 정부효율성(관료주의 질/제도 효율성 및 과도한 관료주의/레드테이프 정도), V9: 정부투명성(정부정책의 투명성 만족도), V10: 행정투명성(공공조달, 토지대장, 상거래 등록, 감사원의 연례보고서의 공개정도), V11: 규제완화 및 품질(불공정한 경쟁 관행, 가격통제, 차별적 관세, 과도한 보호, 차별적 과세의 정도), V13: 규제완화 및 품질(온라인 서비스(무여객정도), V14: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지수(국경 없는 기자회)), V15: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확장), V16: 언론의 자유, V17: 시민참여(열린 예산지수), V18: 시민참여(열린 정부, V19: 시민참여(제한된 정부 권력), V20: 시민참여(행정부의 예산 제한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의 정도와 질), V21: 시민참여(광대역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 수와 전체 인구 대비 Facebook 사용자 수)

(2) 추이분석

우리나라보다 청렴도(CPI)가 높은 나라와의 원천자료(변수) 비교를 통해 보면 2021년 평가에 비해 2023년도는 전체적으로 0.12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평가에 비해 상승된 변수로는 총 17개 변수 중 11개⁶⁾이며, 변화가 없는 변수 1개,⁷⁾ 하락한 변수는 5개⁸⁾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크게 개선된 변수로는 V10: 행정투명성<공공조달, 토지대장, 상거래 등록, 감사원의 연례보고서의 공개정도(0.78)>, V17: 시민참여<열린 예산지수(0.75)>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V3: 법치주의<암거래 경제의 경제발전 저해 정도(-0.16)>와 V13: 규제완화 및 품질<온라인 서비스(무역개방정도(-0.11))>는 가장 많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V13은 앞선 분석에서 2023년 기준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추세적으로 하락 경향을 보여 온라인서비스에 있어 무역개방에 대한 규제완화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6) v10(0.78 ↑), v17(0.75 ↑), v5(0.26 ↑), v11(0.18 ↑), v14(0.13 ↑), v2(0.1 ↑), v4(0.09 ↑), v7(0.07 ↑), v18(0.07 ↑), v21(0.05 ↑), v16(0.01 ↑)

7) v6(0.00)

8) v3(0.16 ↓), v13(0.11 ↓), v1(0.05 ↓), v8(0.05 ↓), v19(0.05 ↓)

〈표 10〉 한국보다 부패인식지수(CPI)가 높은 국가와의 반부패통제지수(CCI) 원천자료 추이분석

변수	우리나라와 비교(a)	뉴질랜드(b)		싱가포르(c)		호주(d)		홍콩(e)		일본(f)		부탄(g)		대만(h)		전체 평균
		차이 (a-b)	개선 정도	차이 (a-c)	개선 정도	차이 (a-d)	개선 정도	차이 (a-e)	개선 정도	차이 (a-f)	개선 정도	차이 (a-g)	개선 정도	차이 (a-h)	개선 정도	
V1	2023년	-	-	1.04	-0.18	-	-	-	-	-	-	0.42	-0.02	-0.62	0.05	-0.05
	2021년	-	-	1.22	-	-	-	-	-	-	0.44	-	-0.67	-	-	
V2	2023년	-1.83	0.45	-1.50	0.60	-1.57	-0.21	-1.77	-0.21	-1.70	-0.25	-	-	-0.85	0.23	0.10
	2021년	-2.28	-	-2.10	-	-1.36	-	-1.56	-	-1.45	-	-	-	-1.08	-	
V3	2023년	-2.64	0.12	-2.23	-0.11	-1.95	-0.47	-2.22	0.01	-2.04	-0.37	-	-	-1.72	-0.15	-0.16
	2021년	-2.76	-	-2.12	-	-1.48	-	-2.23	-	-1.67	-	-	-	-1.57	-	
V4	2023년	0.00	0.51	0.00	0.00	-0.54	-0.03	0.96	0.05	0.00	0.00	-	-	0.00	0.00	0.09
	2021년	-0.51	-	0.00	-	-0.51	-	0.91	-	0.00	-	-	-	0.00	-	
V5	2023년	-1.82	0.21	-	-	-1.19	0.53	-	-	-1.86	0.04	-	-	-	-	0.26
	2021년	-2.03	-	-	-	-1.72	-	-	-	-1.90	-	-	-	-	-	
V6	2023년	-	-	-0.86	0.00	-	-	-	-	-	-0.86	0.00	-0.86	0.00	0.00	0.00
	2021년	-	-	-0.86	-	-	-	-	-	-	-0.86	-	-0.86	-	-	
V7	2023년	0.33	0.16	-0.51	0.07	0.16	-0.01	-0.09	0.07	-0.09	0.07	-	-	-	-	0.07
	2021년	0.17	-	-0.58	-	0.17	-	-0.16	-	-0.16	-	-	-	-	-	
V8	2023년	0.00	0.00	-0.37	0.01	-0.37	0.01	-0.37	0.01	0.00	-0.38	1.12	-0.02	0.37	-0.01	-0.05
	2021년	0.00	-	-0.38	-	-0.38	-	-0.38	-	0.38	1.14	-	-	0.38	-	
V9	2023년	-0.68	-	-2.19	-	-1.79	-	-2.22	-	-0.44	-	-	-	-1.46	-	-
	2021년	-	-	-	-	-	-	-	-	-	-	-	-	-	-	
V10	2023년	-0.67	0.16	-	-	1.34	1.34	-	-	0.85	0.85	-	-	-	-	0.78
	2021년	-0.83	-	-	-	0.00	-	-	-	0.00	-	-	-	-	-	
V11	2023년	-0.61	0.00	-0.61	0.20	-0.61	0.00	-0.20	-0.40	-0.40	0.21	0.81	0.41	0.41	0.82	0.18
	2021년	-0.61	-	-0.81	-	-0.61	-	0.20	-	-0.61	0.40	-	-	-0.41	-	
V13	2023년	0.12	-0.22	-	-	0.22	-0.03	-	-	0.36	-0.09	-	-	-	-	-0.11
	2021년	0.34	-	-	-	0.25	-	-	-	0.45	-	-	-	-	-	
V14	2023년	-0.55	0.16	1.34	-0.34	-0.44	-0.25	1.51	1.14	0.40	0.11	0.67	0.38	-0.28	-0.30	0.13
	2021년	-0.71	-	1.68	-	-0.19	-	0.37	-	0.29	0.11	0.29	0.38	0.02	-	
V15	2023년	-0.14	-	1.68	-	0.10	-	-	-	0.08	-	0.97	-	0.08	-	-
	2021년	-	-	-	-	-	-	-	-	-	-	-	-	-	-	
V16	2023년	-0.73	0.17	-	-	-0.40	-0.15	-	-	0.38	0.02	-	-	-	-	0.01
	2021년	-0.90	-	-	-	-0.25	-	-	-	0.36	-	-	-	-	-	
V17	2023년	-0.66	0.79	-	-	-0.30	0.68	-	-	0.78	0.78	-	-	-	-	0.75
	2021년	-1.45	-	-	-	-0.98	-	-	-	0.00	-	-	-	-	-	
V18	2023년	-0.65	0.10	0.58	0.11	-0.59	0.09	0.06	0.20	0.06	-0.14	-	-	-	-	0.07
	2021년	-0.75	-	0.47	-	-0.68	-	-0.14	-	0.20	-	-	-	-	-	
V19	2023년	-0.94	-0.08	0.19	-0.15	-0.69	-0.03	0.75	0.28	-0.19	-0.26	-	-	-	-	-0.05
	2021년	-0.86	-	0.34	-	-0.66	-	0.47	-	0.07	-	-	-	-	-	
V20	2023년	-0.36	-	-	-	-0.48	-	-	-	0.96	-	-	-	-	-	-
	2021년	-	-	-	-	-	-	-	-	-	-	-	-	-	-	
V21	2023년	0.03	0.06	-	-	0.02	-0.09	-	-	0.59	0.17	-	-	-	-	0.05
	2021년	-0.03	-	-	-	0.11	-	-	-	0.42	-	-	-	-	-	
평균																0.12

V1: 법치주의(권력분립, 사법부독립, 시민권, 적위남용기소의 정도), V2: 법치주의(사법의 공정한 집행), V3: 법치주의(암거래 경제의 경제발전 저해 정도), V4: 법치주의(법과 질서), V5: 법치주의(정부, 시민 또는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 정도), V6: 부패통제(반부패정책의 부패통제 정도), V7: 부패통제(범죄의 효율적 통제), V8: 정부효율성(관료주의 질/제도효율성 및 과도한 관료주의/레드테이프 정도), V9: 정부투명성(정부정책의 투명성 만족도), V10: 행정투명성(공공조달, 토지대장, 상거래 등록, 감사원의 연례보고서의 공개정도), V11: 규제완화 및 품질(불공정한 경쟁 관행, 가격통제, 차별적 관세, 과도한 보호, 차별적 과세의 정도), V13: 규제완화 및 품질(온라인 서비스(무역개방정도)), V14: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지수(국경 없는 기자회)), V15: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확장), V16: 언론의 자유, V17: 시민참여(열린 예산지수), V18: 시민참여(열린 정부), V19: 시민참여(제한된 정부 권력), V20: 시민참여(행정부의 예산 제 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의 정도와 질), V21: 시민참여(광대역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 수와 전체 인구 대비 Facebook 사용자 수)

(3) 매트릭스 분석

앞선 2023년 부패통제지수 평가결과(강점, 개선 필요성 높음)와 2021년과 2023년간 추이분석(개선, 악화)을 매트릭스화 하여 종합해 보면 한국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에 기초해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IT 강국의 이점을 살려 온라인상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자유경쟁을 허용함과 동시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⁹⁾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정부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치주의가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사법의 공정한 집행 및 사법부 독립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변수로 평가된 암거래 경제가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법자금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강화가 요구된다.

국제사회에서 많은 정부들이 부패방지법을 강화하고 부패방지기관의 권한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대부분 국가에서 실제 부패가 증가했다고 한다.(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2023)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 기술적 변화로 인해 모든 국가에서 온라인 범죄율이 증가했고, 일부 남용에는 허위 웹사이트, 피싱, 가짜 송장, 사기, 갈취, 개인 데이터 유출, 신용카드사기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범죄의 배후에는 치안 당국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새로운 형태의 부패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ttp://www.asiarisk.com>) 특히 최근 코인 암시장이 자금세탁 창구로 이루어져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96901)

9)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생각함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2023년 부패통제지수 평가결과 및 2021년과 2023년간 추이분석을 활용한 메트릭스 분석

한국보다 CPI가 높은 국가와의 비교			추이분석(2023년, 2021년간 비교, 종단면 분석)	
			개선된 변수	악화된 변수
			V2, V4, V5, V7, V10, V11, V14, V16, V17, V21	V1, V3, V8, V13, V19
2023년 부패통제지수 결과(한국) (횡단면 분석)	강점인 변수	V13, V21	V21: 시민참여<광대역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 수와 전체 인구 대비 Facebook 사용자 수>	V13: 규제완화 및 품질 <온라인 서비스 (무역개방정도)>
	개선 필요성 높은 변수	V2, V3, V5, V6, V9	V2: 법치주의<사법의 공정한 집행> V5: 법치주의<정부, 시민 또는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 정도>	V3: 법치주의<암거래 경제의 경제발전 저해 정도>

4. 청렴지수(Integrity Index: II)

1) 청렴지수 결과

청렴지수는 부패통제지수(CCI)와 부패인식지수(CPI)가 모두 적용되는 27개국을 대상으로 부패통제지수의 표준화 점수(z-score)¹⁰⁾와 국가별 CP점수의 표준화 점수(z-score)를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text{청렴지수(Integrity Index)}_i = \left(\frac{CCI_i - \mu CCI}{\sigma CCI} \right) + \left(\frac{CPI_i - \mu CPI}{\sigma CPI} \right)$$

- X_i = 해당 국가의 원래지수(CCI or CPI)
- μ = 전체 국가의 평균 지수
- σ = 전체 국가의 표준편차

청렴지수를 산정할 때 부패통제지수 점수(평균)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표준화한 것은 원천자료 수의 상이함으로 인한 측정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10) 부패통제지수를 도출하는데 자료 수에 의한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화(z-score) 함.

CPI점수도 같이 표준화시켜 국가별 점수합계의 평균값을 0점으로 설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청렴지수를 구성하는 부패통제지수(노력도)와 CPI 지수(인식수준)를 표준화함으로써 어느 국가가 반부패·청렴노력 비해 청렴수준이 과소평가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대평가 받고 있는 것인지 지수 간 상호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청렴지수 결과를 보면 가장 높게 평가받은 국가는 3.73점인 뉴질랜드로, 가장 낮게 평가받은 국가로는 -2.87점인 북한이며, 한국은 1.94점으로 나타났다.

청렴지수 상위 10위권으로는 뉴질랜드(1위, 3.73점), 싱가포르(2위, 3.08점), 호주(3위, 3.06점), 홍콩(4위, 2.60점), 일본(5위, 2.49점), 대만(6위, 2.46점), 부탄(7위, 2.02점), 한국(8위, 1.94점), 말레이시아(9위, 0.57점), 동티모르(10위, -0.1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청렴지수 순위와 2023년 CPI 순위와 비교해 볼 때, 청렴지수 순위는 대만이 1단계 상승해 각각 6위를 기록했고, 이에 반해 홍콩과 부탄이 각각 한 단계 하락한 4위와 7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동티모르는 변화 없이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다.

전체 27개국 중 인도네시아가 청렴지수 순위가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 비해 5단계 상승했으며, 중국이 6단계 하락했다.

〈표 12〉 청렴지수(Integrity Index, II) 전체평가결과

국가	부패통제 지수	부패통제 지수 표준화 점수(A)	2023 CPI 점수	CPI 표준화 점수(B)	청렴지수 (A+B)	청렴지수 순위(C)	2023 CPI* 순위(D)	CPI 순위대비 상승정도 (D-C)
New Zealand	1.37	1.80	85	1.93	3.73	1	1	0
Singapore	0.93	1.25	83	1.83	3.08	2	2	0
Australia	1.22	1.61	75	1.45	3.06	3	3	0
Hong Kong	0.85	1.14	75	1.45	2.60	4	3	-1
Japan	0.84	1.13	73	1.36	2.49	5	5	0
Taiwan	1.05	1.39	67	1.07	2.46	6	7	1
Bhutan	0.66	0.90	68	1.12	2.02	7	6	-1
Korea, South	0.78	1.05	63	0.88	1.94	8	8	0

국가	부패통제 지수	부패통제 지수 표준화 점수(A)	2023 CPI 점수	CPI 표준화 점수(B)	청렴지수 (A+B)	청렴지수 순위(C)	2023 CPI* 순위(D)	CPI 순위대비 상승정도 (D-C)
Malaysia	0.19	0.31	50	0.27	0.57	9	9	0
Timor-Leste	-0.13	-0.09	43	-0.07	-0.16	10	10	0
Indonesia	0.1	0.19	34	-0.49	-0.30	11	16	5
India	-0.13	-0.10	39	-0.25	-0.35	12	13	1
Thailand	-0.1	-0.06	35	-0.44	-0.51	13	14	1
Vietnam	-0.37	-0.39	41	-0.16	-0.55	14	12	-2
Nepal	-0.21	-0.20	35	-0.44	-0.64	15	14	-1
Papua New Guinea	-0.01	0.06	29	-0.73	-0.67	16	20	4
China	-0.53	-0.60	42	-0.11	-0.71	17	11	-6
Mongolia	-0.2	-0.18	33	-0.54	-0.72	18	19	1
Sri Lanka	-0.31	-0.32	34	-0.49	-0.81	19	16	-3
Philippines	-0.32	-0.33	34	-0.49	-0.82	20	16	-4
Pakistan	-0.57	-0.64	29	-0.73	-1.37	21	20	-1
Bangladesh	-0.73	-0.85	24	-0.97	-1.82	22	23	1
Laos	-1.13	-1.35	28	-0.78	-2.13	23	22	-1
Cambodia	-1.05	-1.26	22	-1.06	-2.32	24	24	0
Afghanistan	-1.11	-1.32	20	-1.16	-2.48	25	25	0
Myanmar	-1.31	-1.58	20	-1.16	-2.73	26	25	-1
Korea, North	-1.3	-1.57	17	-1.30	-2.87	27	27	0

* 아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CPI 점수의 서열적 순위를 의미

2) 청렴지수 추이

2021년 대비 2023년 청렴지수 점수추이를 보면 27개 대상국 중 네팔의 상승분이 0.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동티모르(+0.33점), 파키스탄(+0.31점), 한국(+0.28점), 베트남(+0.27점), 말레이시아(+0.22점) 등으로 나타났다.

청렴지수 상위 10위권 국가 중 청렴지수가 개선된 국가로는 호주(+0.12점), 한국(+0.28점), 말레이시아(+0.22점), 동티모르(+0.33점)로 나타나 한국은 동티모르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개선을 보였다.

이에 반해 뉴질랜드(-0.22점), 싱가포르(-0.22점), 홍콩(-0.06점), 대만(-0.03점), 부탄(-0.21점)은 하락하였고 일본은 이전 평가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청렴지수 순위의 변화로는 네팔이 5단계 상승으로 가장 많은 개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4단계 상승), 동티모르(3단계 상승), 태국(2단계 상승)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청렴지수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로는 스리랑카로 7단계 하락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3단계 하락) 및 미얀마(3단계 하락), 인도(2단계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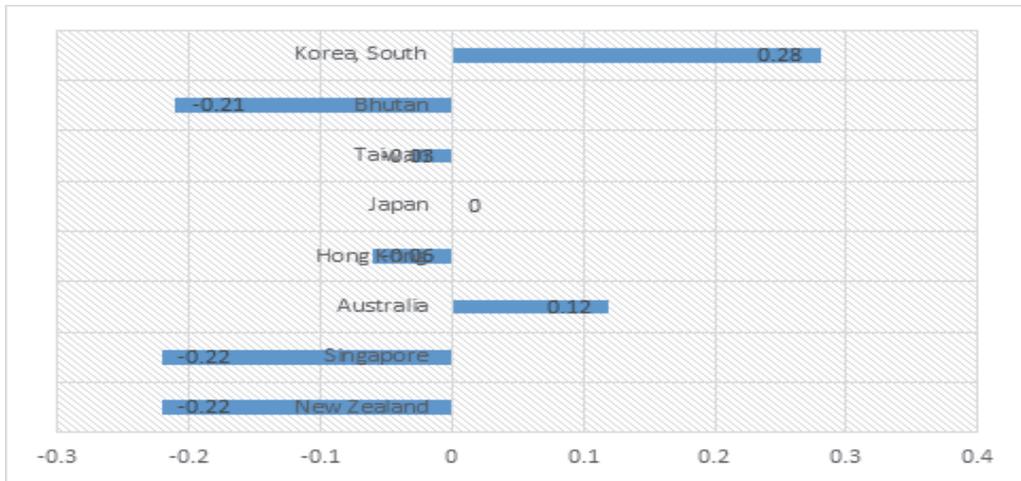
청렴지수 상위 10위권 국가들의 청렴지수 순위 변화는 동티모르가 3단계 상승했고, 대만이 한 단계 하락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일본, 부탄, 말레이시아)들의 청렴순위 변화는 없었다.

〈표 13〉 청렴지수(Integrity Index, II) 추이분석

국가	2023 청렴지수	2021 청렴지수	청렴지수변화	2023 청렴지수 순위	2021 청렴지수순위	청렴지수순위 변화
New Zealand	3.73	3.95	-0.22	1	1	0
Singapore	3.08	3.30	-0.22	2	2	0
Australia	3.06	2.94	0.12	3	3	0
Hong Kong	2.60	2.66	-0.06	4	4	0
Japan	2.49	2.49	0.00	5	5	0
Taiwan	2.46	2.49	-0.03	6	5	-1
Bhutan	2.02	2.23	-0.21	7	7	0
Korea, South	1.94	1.66	0.28	8	8	0
Malaysia	0.57	0.35	0.22	9	9	0
Timor-Leste	-0.16	-0.49	0.33	10	13	3
Indonesia	-0.30	-0.31	0.01	11	11	0
India	-0.35	-0.21	-0.14	12	10	-2
Thailand	-0.51	-0.61	0.1	13	15	2
Vietnam	-0.55	-0.82	0.27	14	18	4
Nepal	-0.64	-1.10	0.46	15	20	5
Papua New Guinea	-0.67	-0.65	-0.02	16	16	0
China	-0.71	-0.50	-0.21	17	14	-3
Mongolia	-0.72	-0.79	0.07	18	17	-1

국가	2023 청렴지수	2021 청렴지수	청렴지수변화	2023 청렴지수 순위	2021 청렴지수순위	청렴지수순위 변화
Sri Lanka	-0.81	-0.44	-0.37	19	12	-7
Philippines	-0.82	-0.89	0.07	20	19	-1
Pakistan	-1.37	-1.68	0.31	21	21	0
Bangladesh	-1.82	-1.82	0.00	22	22	0
Laos	-2.13	-2.01	-0.12	23	23	0
Cambodia	-2.32	-2.19	-0.13	24	25	1
Afghanistan	-2.48	-2.58	0.10	25	26	1
Myanmar	-2.73	-2.01	-0.72	26	23	-3
Korea, North	-2.87	-2.95	0.08	27	27	0

특히 한국보다 청렴지수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청렴지수의 개선도(0.28점)가 가장 좋은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0.12점) 제외한 국가들의 청렴지수가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데 비해 한국의 청렴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반부패·청렴 개선노력의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 2021년 대비 2023년 청렴지수(Integrity Index, II)의 개선 변화폭

3) 한국의 평가(한국의 청렴도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는가?)

현재 국가별 부패인식 또는 청렴도 평가는 대표적으로 부패인식지수(CPI)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 부패인식지수는 한 국가의 부패실태 중심의 평가체계 구조로 반부패·청렴을 위한 국가의 노력 정도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력의 사적 남용이 어느 정도인지만 파악할 수 있지 해당 결과를 통해 청렴도 개선을 위해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만약 두 국가가 부패인식지수의 점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법제도적 장치마련, 반부패 청렴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국가별 반부패·청렴 노력 정도가 상이할 경우 과연 두 국가가 동일한 청렴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부패인식지수 한계점에 부패통제노력도인 부패통제지수를 가미하여 보완하는 것이 청렴지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청렴지수를 구성하는 부패통제지수의 표준화 점수와 부패인식지수의 표준화 점수 비교를 통해 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가 과소평가되어 있는지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평가의 적정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부패통제지수가 부패인식지수(CPI)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기존 부패인식지수(CPI)평가 위주로 운영될 경우 부패통제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실제 청렴수준보다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주, 2022)

평가결과, 부패인식지수(CPI)가 부패통제지수(CC)보다 높은 나라로는 13개국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부탄,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 미얀마, 북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패통제지수가 부패인식지수(CPI)보다 높은 나라로 한국을 비롯한 호주,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총 14개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부패인식지수(CPI) 평가만을 가지고 청렴도를 평가 받을 경우 부패인식지수 보다 높은 부패통제지수 관련 요인들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 과소평가 받는 것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



〈표 14〉 2023년 기준 부패통제지수와 CPI지수 간의 표준화 점수 비교

국가	부패통제지수 표준화점수 (A)	부패인식지수(CPI) 표준화 점수 (B)	A-B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 (실태)	부패통제지수가 높은 나라 (노력도)
New Zealand	1.80	1.93	-0.13	◎	
Singapore	1.25	1.83	-0.58	◎	
Australia	1.61	1.45	0.16		◎
Hong Kong	1.14	1.45	-0.31	◎	
Japan	1.13	1.36	-0.23	◎	
Taiwan	1.39	1.07	0.32		◎
Bhutan	0.90	1.12	-0.22	◎	
Korea, South	1.05	0.88	0.17		◎
Malaysia	0.31	0.27	0.04		◎
Timor-Leste	-0.09	-0.07	-0.02	◎	
Indonesia	0.19	-0.49	0.68		◎
India	-0.10	-0.25	0.15		◎
Thailand	-0.06	-0.44	0.38		◎
Vietnam	-0.39	-0.16	-0.23	◎	
Nepal	-0.20	-0.44	0.24		◎
Papua New Guinea	0.06	-0.73	0.79		◎
China	-0.60	-0.11	-0.49	◎	
Mongolia	-0.18	-0.54	0.36		◎
Sri Lanka	-0.32	-0.49	0.17		◎
Philippines	-0.33	-0.49	0.16		◎
Pakistan	-0.64	-0.73	0.09		◎
Bangladesh	-0.85	-0.97	0.12		◎
Laos	-1.35	-0.78	-0.57	◎	
Cambodia	-1.26	-1.06	-0.20	◎	
Afghanistan	-1.32	-1.16	-0.16	◎	
Myanmar	-1.58	-1.16	-0.42	◎	
Korea, North	-1.57	-1.30	-0.27	◎	

IV. 요약 및 결론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국가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 부패인식지수(CPI)가 한 국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현 평가시스템이 우리나라와 같이 각종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위주로 청렴문화 확산전략을 구사하는 국가의 청렴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청렴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기존 이정주(2022)의 연구에서 부패인식지수(CPI)가 담지 못하는 부패통제 노력도 측면을 반영하는 부패통제지수(CCI) 개념을 최초로 제안했고, 이 두 가지를 통합한 청렴지수(II)도 새롭게 제안했다.

본 연구는 기존 이정주(2022)의 연구에서 최초로 제시한 부패통제지수의 원천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부패통제지수(CCI)와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합한 청렴지수(II)의 추이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아태지역 27개 국가의 청렴도 개선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부패통제지수 적합성 검증이 한 차례만 이루어져,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부패통제지수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했다. 방법론적으로 기존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태지역 국가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통제노력결과로 부패인식지수가 높아 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21개 부패통제지수 원천자료와 2023년 부패인식지수(CPI)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원천자료로는 법치주의 5개, 부패통제 2개, 정부효율성 1개, 정부투명성 2개, 규제완화 및 품질 2개, 언론자유 3개, 시민참여 5개로 총 20개가 도출되었다.

기존 연구(이정주, 2022)는 부패통제지수를 구성하는 유의미한 원천자료는 18개인데 이 중 하나를 제외하고 17개 모두 동일하다는 점, 또한 기존 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총 21개의 원천자료 중 86%에 그친 반면, 현 연구에서에서는 95%가 유의미함에 따라 부패통제지수는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2023년 기준 부패통제지수 평가결과, 상위 10권 국가로는 뉴질랜드(1.37점), 호주(1.22점), 대만(1.05점), 싱가포르(0.93점), 홍콩(0.85점), 일본(0.84점), 한

국(0.78점), 부탄(0.66점), 말레이시아(0.19점), 인도네시아(0.10점) 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국가 중 부패통제지수(CCI) 순위가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높은 국가로는 한국(1단계)을 포함한 호주(1단계), 대만(4단계), 인도네시아(6단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부패통제지수(CCI) 순위보다 높게 나타난 국가로는 싱가포르(2단계), 홍콩(2단계), 일본(1단계), 부탄(2단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와 부패통제지수(CCI) 순위가 동일한 국가로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2023년 부패통제지수가 가장 많이 개선된 상위 10개 국가로는 네팔(+0.26), 파키스탄(+0.18), 동티모르(+0.16), 한국(+0.14), 인도네시아(+0.13), 베트남(+0.11), 몽골(+0.10), 말레이시아(+0.07), 태국 및 방글라데시(+0.0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2023년 부패통제지수 상위 10위권 국가 중 한국(+0.14점)이 가장 많이 개선되어 반부패·청렴노력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보다 부패통제지수가 높은 뉴질랜드(-0.12점), 호주(-0.03점), 대만(-0.03점), 싱가포르(-0.15점), 홍콩(-0.06점), 일본(-0.05점) 국가들은 오히려 부패통제노력이 이전보다 후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를 2023년 부패통제지수 평가결과(강점, 개선 필요성 높음)와 2021년과 2023년 간 추이(개선, 악화)를 매트릭스 분석 해 보면, IT 강국의 이점을 살려 온라인상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자유경쟁을 허용함과 동시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사법의 공정한 집행 및 사법부 독립을 위한 지속적 개선과 불법자금을 막기 위한 자금 세탁방지 강화가 더욱더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청렴지수 결과를 보면 가장 높게 평가받은 국가는 3.73점인 뉴질랜드로, 가장 낮게 평가받은 국가로는 -2.87점인 북한이며, 한국은 1.94점으로 나타났다. 청렴지수 상위 10위권으로는 뉴질랜드(1위, 3.73점), 싱가포르(2위, 3.08점), 호주(3위, 3.06점), 홍콩(4위, 2.60점), 일본(5위, 2.49점), 대만(6위, 2.46점), 부탄(7위, 2.02점), 한국(8위, 1.94점), 말레이시아(9위, 0.57점), 동티모르(10위, -0.1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청렴지수 순위와 2023년 CPI 순위와 비교해 볼 때, 청렴지수 순위는 대만이 1단계 상승해 각각 6위를 기록했고, 이에 반해 홍콩과 부탄이 각각 한 단계 하락한 4위와 7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동티모르는 변화 없이 동일한 순위로 나

타났다. 전체 27개국 중 인도네시아가 청렴지수 순위가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 비해 5단계 상승했으며, 중국이 6단계 하락했다.

2021년 대비 2023년 청렴지수 점수추이를 보면 27개 대상국 중 네팔의 상승분이 0.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동티모르(+0.33점), 파키스탄(+0.31점), 한국(+0.28점), 베트남(+0.27점), 말레이시아(+0.22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청렴지수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청렴지수의 개선도가 가장 좋은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를 제외한 국가들의 청렴지수가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데 비해 한국의 청렴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반부패·청렴 개선노력의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청렴지수 순위의 변화로는 네팔이 5단계 상승으로 가장 많은 개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4단계 상승), 동티모르(3단계 상승), 태국(2단계 상승)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청렴지수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로는 스리랑카로 7단계 하락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3단계 하락) 및 미얀마(3단계 하락), 인도(2단계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청렴지수 상위 10위권 국가들의 청렴지수 순위 변화는 동티모르가 3단계 상승했고, 대만이 한 단계 하락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일본, 부탄, 말레이시아)들의 청렴순위 변화는 없었다.

국가 간 부패실태수준과 부패통제노력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2023년 기준 부패통제지수와 CPI지수 간의 표준화 점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부패통제지수(CCI)가 부패인식지수(CPI)보다 높은 나라로 기존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방식 위주로 운영될 경우 부패통제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청렴도가 과소평가 받는 것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 이는 이전 2021년 기준 부패통제지수와 CPI지수 간의 표준화 점수를 비교한 이정주(2022)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반부패·청렴 관련 법 제도를 통해 청렴문화 형성 전략을 구사하는 우리나라에게는 기존 CPI 평가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국제사회에서 청렴도를 평가를 받는데 있어 어떠한 원천자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청렴도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투명성기구(TI)에게 기존 부패인식지수(CPI) 이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부패통제지수와 같은 별도 지수를 만들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게 하거나, 여건상 부패인식지수(CPI)를 그대로 운영해야 할 경우 부패인식지수 원천자료에 부패통제지수 원천자료를 적극 반영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정주, 2022)

특히 우리는 이에 대한 대체지표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뉴질랜드, 호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공청렴지수(IPI)의 “온라인 서비스(무역개방정도)”, “전자시민(광대역 가입 및 인터넷 사용 수와 전체 인구대비 페이스북 사용자 수)” 지표를 국제투명성 기구에 제안하여 부패인식지수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모형은 평가대상기관의 부패방지노력 측면의 청렴노력도 평가와 인식결과를 반영하는 청렴체감도 평가를 통합한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의 부패통제지수와 부패인식지수를 통합한 청렴지수와 거의 유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평가시스템 측정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시스템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존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와 유사하게, 부패통제지수 또한 원천자료의 선정 기준, 자료 활용 시점, 평가 대상 국가의 범위에 따라 청렴지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평가모형을 구성하는 원천자료 도출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렴도 평가모형을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초기 단계 연구라는 특성상 평가모형의 정합성 및 원천자료의 신뢰성,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갱신되는 원천자료의 체계적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모형의 측정 지표를 보완하고, 연구 범위를 아태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CPI 평가 대상국 전체로 확장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적·체계적 검토 과정은 청렴도 평가모형의 과학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별 부패 현상과 청렴성 제고 전략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진영, 2019., 부패측정과 부패지수 비교연구: CPI, CCI, IPI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4(4): 47-74.

이정주, 2022., 부패인식지수(CPI)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새로운 청렴지수모형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7(4): 7-42.

[외국문헌(서양)]

Anderson, S. & P. Heywood, 2009., “The Politics of Perception: Use and Abuse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s Approach to Measuring Corruption”. Political Studies. 57: 746~767.

<https://doi.org/10.1111/j.1467-9248.2008.00758.x>.

[인터넷 등 온라인 자료]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3>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

<https://corruptionrisk.org/>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96901

<http://www.asiarisk.com>

Abstract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Corruption Control Index and Integrity Index as New Measures of Integrity Evaluation: Focusing on the Asia-Pacific Region

Lee, Chung Joo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
PhD in Public Administration/Director, Korea Institute for Anti Corruptio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improvement in integrity levels of 27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y analyzing trends using the Corruption Control Index (CCI) and the Integrity Index (II), which integrates the CCI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The source data for the CCI, initially presented in the study by Lee Chung-Joo(2022), has been updated, making it possible to analyze trends in the CCI and the II.

Based on the source data of the CCI, a correlation analysis with the CPI was conducted to verify its suitability. The results showed that,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y (Lee Chung-Joo, 2022), 17 out of 18 items were identical. Additionally, while the previous study found that 86% of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 out of a total of 21 source data,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95% were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 CCI is generally suitable.

In particular, the Republic of Korea showed the most improvement among the top 10 countries in the 2023 CCI evaluation, with an increase of +0.14 points compared to the 2021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countries and economies with higher CCI scores than Korea, such as New Zealand (-0.12 points), Australia (-0.03 points), Taiwan (-0.03 points), Singapore (-0.15 points), Hong Kong (-0.06 points), and Japan (-0.05 points), were evaluated as having regressed in their corruption control efforts compared to the past.

When examining the trend in II scores, compared to countries with higher integrity scores than Korea, it was found that, except for Australia (+0.12), the integrity scores of other countries either remained unchanged (Japan) or declined (New Zealand, Singapore, Hong Kong, Taiwan, Bhutan). In contrast, Korea's integrity score showed the most significant increase (+0.28).

Despite these improvements, it is still necessary to enhance the integrity of Korean society by leveraging its advantages as an IT-advanced nation. This includes eliminating unnecessary online regulations and allowing free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media, continuously improve the fair execution of justice and judicial independence, and strengthen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to prevent illicit funds.

Meanwhile, Korea has a higher CCI than the CPI. If the evaluation is primarily based on the existing CPI method, the efforts to control corruption may not be properly reflected, leading to an underestimation of the actual level of integrity and potential disadvantages in integrity assessment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ersuade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to create and incorporate a separate index, such as the CCI proposed in this study, into the integrity assessmen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PI. If it is necessary to continue using the CPI, it is crucial to actively reflect the source data of the CCI in the source data of the CPI to ensure that Korea does not face disadvantages in integrity assessments.

Key word Trend Analysis, Integrity Evaluation, Corruption Control Index(CCI), Integrity Index(I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Asia Pacific Region.

〈부록 1〉 세계 거버넌스 지표 점수 현황

아태국가	2023 CPI		2022 BTI (법치주의, 권력분립, 사법독립, 시민권, 자위비용 기소) (v1)	2022BTI (반부패 정책) (v6)	2022EIU (정부효성) (v8)	2022EIU (규제약질) (v11)	2022 WCY-1 (정부 정책 투명성 만족) (v9)	2022 WCY-2 (안료주의 기업 활동 방해하지 않음) (v12)	2022 WCY-3 (공정성 관리) (v2)	2022 WCY-4 (안시장 경제발전 저해하지 않음) (v3)	2021/ 2022 OBI (열린예산 자수) (v17)	2022 PRS (법과 질서) (v4)	2022 RSF (언론자유 지수) (v14)	2022 VDM (표형의 자유 확장) (v15)	2022 WJP (열린 정부) (v18)	2022 WJP (제한된 정부 권력) (v19)	2022 WJP (범죄의 효율적 통제) (v7)	
	점수	순위																
최소~최대			0~10	0~10	0~1	0~1	0~10	0~10	0~10	0~10	0~100	0~1	0~100	0~1	0~1	0~1	0~1	0~1
New Zealand	85	3			0.875	0.950	4.89	3.33	8.18	7.69	85	0.83	80.23	0.948	0.81	0.85	0.88	
Singapore	83	5	6.00	9.00	1.000	0.950	6.68	6.14	7.61	7.08		0.83	47.88	0.376	0.62	0.67	0.98	
Australia	75	14			1.000	0.950	6.20	4.79	7.73	6.68	79	0.92	78.24	0.872	0.80	0.81	0.90	
Hong Kong	76	14			1.000	0.850	6.71	5.33	8.07	7.07		0.67	44.86		0.70	0.58	0.93	
Japan	73	16			0.875	0.900	4.61	4.86	7.95	6.81	61	0.83	63.95	0.879	0.70	0.73	0.93	
Bhutan	68	26	7.50	9.00	0.500	0.600							59.25	0.671				
Taiwan	67	28	10.00	9.00	0.750	0.700	5.81	4.74	6.50	6.33		0.83	75.54	0.88				
Korea, South	63	32	8.50	7.00	0.875	0.800	4.09	1.69	5.04	3.80	74	0.83	70.83	0.904	0.71	0.70	0.92	
Fiji	52	53									37		59.27	0.527				
Malaysia	50	57	5.25	6.00	0.750	0.700	5.03	4.05	6.65	4.88	47	0.67	62.83	0.592	0.42	0.55	0.76	
Maldives	39	93											56.93					
Vanuatu	48	61												0.891				
China	42	76	2.25	5.00	0.375	0.600	5.43	3.82	6.06	5.59		0.50	22.97	0.056	0.40	0.32	0.81	
Solomon Islands	43	70																
India	39	93	5.75	5.00	0.500	0.500	5.88	4.52	6.11	4.86	37	0.75	36.62	0.515	0.59	0.58	0.78	
Timor-Leste	43	70	7.00	5.00	0.000	0.450					52			0.799				
Sri Lanka	34	115	5.50	4.00								0.58	45.85		0.51	0.50	0.82	
Indonesia	34	115	6.00	4.00	0.375	0.550	5.61	4.34	5.15	4.36	70	0.42	54.83	0.794	0.55	0.66	0.85	

이태국가	2023 CPI		2022 BTI	2022BTI	2022EIU	2022EIU	2022EIU	2022 WCY-1	2022 WCY-2	2022 WCY-3	2022 WCY-4	2021/2022	2022 PRS	2022 RSF	2022 VDM	2022 WJP	2022 WJP	2022 WJP
	점수	순위	(변치주의: 권력분립, 사법독립, 시민권, 자의남용 기소) (v1)	(반부패 정책) (v6)	(정부효성) (v8)	(규제의질) (v11)	(정부 정책 투명성 만족) (v9)	(민주주의 권료주의 기업 활동 방해하지 않음) (v12)	(공정성 관리) (v2)	(인시정 경제발전 저해하지 않음) (v3)	2022 OBI (열린예산 지수) (v17)	(법과 질서) (v4)	(언론자유 지수) (v14)	(표형의 자유 확장) (v15)	(법률의 정부) (v18)	(제한된 정부 권력) (v19)	(법외의 효율적 통제) (v7)	
최소~최대			0~10	0~10	0~1	0~1	0~1	0~10	0~10	0~10	0~10	0~100	0~1	0~100	0~1	0~1	0~1	0~1
Vietnam	41	83	2.75	5.00	0.375	0.400						0.67	24.58	0.176	0.46	0.45	0.90	
Thailand	35	108	2.75	5.00	0.500	0.650	3.97	5.91	5.04	5.04	58	0.42	55.24	0.429	0.48	0.45	0.79	
Mongolia	33	121	6.25	4.00	0.375	0.550	1.33	2.39	2.95	2.95	60	0.58	59.33	0.797	0.49	0.54	0.84	
Philippines	34	115	4.25	4.00	0.500	0.600	2.06	3.71	3.77	68	0.42	46.21	0.659	0.50	0.48	0.69		
Nepal	35	108	5.50	4.00	0.125	0.200				39		57.89	0.849	0.52	0.59	0.78		
Pakistan	29	133	3.25	2.00	0.250	0.250				46	0.50	39.95	0.662	0.42	0.48	0.59		
Laos	28	136	2.00	3.00	0.125	0.400						30.66	0.03					
Myanmar	20	162	1.00	1.00	0.000	0.450				30	0.50			0.31	0.31	0.81		
Papua New Guinea	29	133	6.00	4.00	0.250	0.450				50	0.50	67.62	0.833					
Bangladesh	24	149	3.00	2.00	0.125	0.350				30	0.42	35.31	0.412	0.41	0.38	0.76		
Cambodia	22	158	2.00	1.00								42.02		0.24	0.27	0.82		
Afghanistan	20	162	1.50	3.00	0.000	0.400				43		39.75	0.102	0.37	0.39	0.46		
Korea, North	17	172	1.25	1.00	0.125	0.000					0.67	21.72	0.013					

〈부록 2〉 아태지역 국가별 IPI 점수 현황

국가	2023 CPI		2023 IPI		사법 독립성 (V5)	행정 투명성 (V10)	온라인 서비스 (V13)	예산 투명성 (V20)	전자 시민 (V21)	언론 자유 (V16)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최소~최대					0~10	0~10	0~10	0~10	0~10	0~10
New Zealand	85	3	9.13	5	8.77	10	9.51	9.36	8.57	8.6
Singapore	83	5								
Australia	75	14	8.26	12	7.68	6.63	9.27	9.57	8.59	7.84
Hong Kong	76	14								
Japan	73	16	7.65	27	8.84	7.75	8.94	7.00	7.36	6.02
Bhutan	68	26								
Taiwan	67	28								
Korea, South	63	32	8.10	15	5.65	8.88	9.8	8.71	8.64	6.9
Fiji	52	53								
Malaysia	50	57	6.86	47	6.38	7.75	7.22	5.92	8.02	5.88
Maldives	39	93								
Vanuatu	48	61								
China	42	76								
Solomon Islands	43	70								
India	39	93	5.27	83	4.19	7.75	7.57	5.93	3.67	2.53
Timor-Leste	43	70	5.61	69	4.52	6.63	2.87	7.86	3.14	8.64
Sri Lanka	34	115	5.01	86	5.17	6.63	4.88	5.49	4.16	3.71
Indonesia	34	115	6.54	52	7.03	6.63	7.23	8.71	4.78	4.86
Vietnam	41	83	5.5	74	6.55	6.63	5.87	5.28	7.68	1.00
Thailand	35	108	6.74	48	4.72	6.63	7.37	8.93	7.9	4.91
Mongolia	33	121	6.25	59	3.46	7.75	5.61	7.86	7.38	5.43
Philippines	34	115	6.03	63	4.21	7.75	5.66	8.71	6.07	3.76
Nepal	35	108	5.53	72	4.59	7.75	3.65	7.00	4.95	5.25
Pakistan	29	133	5.40	77	5.98	7.75	4.9	8.5	2.29	2.96
Laos	28	136								
Myanmar	20	162	2.65	116	3.36	2.13	1.86	3.57	3.54	1.47
Papua New Guinea	29	133								
Bangladesh	24	149	4.89	87	4.01	6.63	5.91	7.43	3.62	2.37
Cambodia	22	158	4.14	99	4.12	4.38	3.16	4.21	5.75	3.22
Afghanistan	20	162								
Korea, North	17	172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권익 연구윤리규정



권익 편집위원회

위원장 조성규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부위원

곽창규 교수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김도승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수관 교수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성중탁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규 교수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이윤정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범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수민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준형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임 현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최태현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내부위원

민성심 국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양종삼 국장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김세신 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

「권익」 2025 제2권 제1호

인쇄 2025년 10월 31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 2025년 10월 31일
발행인 유철환
편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제작 ㈜선미디어 070-4219-2044
발간등록번호 11-1140100-100021-10